5·18 진상조사위 조만간 출범하는데…

실무 담당할 조사관·전문위원 대책 시급

선발·교육에만 6개월 소요
진상규명 활동 차질 우려
광주시 등 대책도 거의 없어
사전교육 등 방안 마련 필요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기까지 산적한 과제가 많아 지역사회와 5월 관련 단체들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2년이란 세월을 거쳐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조사위 실무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만 또 다시 반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사위 출범과 동시에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해야 할 광주시와 5월 관련 기관·단체들의 대책도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이 5·18 진상규명의 적기(適期)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주시와 5·18기관, 5월 단체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부 5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5월 전문가들은 "조만간 조사위가 출범하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텐 데, 광주시 등에선 정치권을 상대로 조사위의 빠른 출범만 요구할 뿐 진상규명을 위한 준비나 활동은 뒷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조사위 출범을 대비한 자체적인 진상규명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조사위원들은 임명과 동시에 정부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34명(별정직)을 공모하고, 10명 안팎의 전문위원은 자체 선발한다.

조사관과 전문위원들은 조사위원의 진상규명 활동을 돕고 ▲5·18진상규명의 방향 설정 ▲5·18관련 기관 보유 문서 사전분석 ▲5·18관련 문서 및 관련 인물 현황 등 확보 ▲5·18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등의 활동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역할 때문에 5·18진상규명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 실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5·18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위원 임명 후에야 공모·선발 절차에 들어가는 탓에 조사위 활동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5·18연구자는 "이들이 선발되더라도 직무 교육 등에 최대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의 선발조건으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실무자 선발시 5·18진상규명 업무에 적합한 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5·18연구자는 "5·18전국화와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5·18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광주사람들로 채워져선 안되며, 5·18을 직업화하고 있는 인물들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5·18연구자들은 진상조사위 출범을 앞둔 시점에 진상규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등을 상대로 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한 연구자는 "진상규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관련 기관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데,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5·18연구소, 5월 3단체 모두 제각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사위 출범과 함께 광주에선 어떤 기관이 대표성을 갖고 조사위를 지원할 지 등 교통정리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안사 5·18 사진첩 오늘 옛 전남도청 별관서 설명회

39년만에 일반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보안사령부 5·18 사진첩〈광주일보 2019년 11월 26일자 1면·27일자 6면〉 13권(1769매·중복포함)을 분석하는 대국민 설명회가 3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의 눈물, 그날의 참상'을 주제로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안신당 박지원·장병완·천정배·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설명회에선 5·18기념재단 이성춘·안길정 자문위원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김태종 연구실장이 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성춘 자문위원은 사진첩 전반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고, 안길정 자문위원은 사진첩 제작 기관에 대한 분석과 사진첩을 제작 배경 등을 발제한다.

김태종 연구실장은 공개된 사진첩의 사진중에 의미 있는 사진을 선별, 사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사업가 살인' 도피 조폭 검거 공조수사 착수

경찰이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개월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를 검거하기 위해 공조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광역수사대 8명과 광주 서부경찰서 강력팀 6명 등 모두 14명으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이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조씨의 행방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씨가 주로 활동한 지역과 납치·살인 등 범행을 시작한 장소가 광주라는 점에서, 공조수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조씨를 포함해 공개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씨는 5월 19일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공범 김모(65), 홍모(61)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주범인 조씨는 사건 직후 잠적해 6개월 넘게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소하다 주운 돈다발 챙긴 환경미화원 잇따라 적발

청소하다 주운 거액의 돈 다발을 챙긴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환경미화원 A(54)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 인근 인도를 청소하던 중 한 건설업자가 떨어뜨린 노동자들의 급여 1000만 원을 주워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인도에서 현금 1000만원을 잃어버렸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돈은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동부경찰은 환경미화원 B(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현금 100만원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주운 뒤,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내의 내연남 불러내 흉기 휘두른 남편 체포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듣고 화가나 상대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진경찰은 2일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던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A(4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 50분께 강진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내연남 B(4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와의 내연관계를 밝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전 집에서 술을 마신 채 B씨를 불러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겉옷에 품고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 부위를 향해 한 차례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목에 10cm 정도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짝수 차량만 운행하세요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 2일 광주시 동구청 민원주차장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어린 참조기 불법 포획 어선 '딱 걸렸네'

완도해경은 2일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참조기를 불법 포획한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89t, 안강망, 여수 선적) 선장 B(63)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께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어린 참조기(15cm 미만) 300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덜 자란 어획물을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에 따르면 총 어획물 중 작은 어획물이 20%를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106km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무허가 중국 자망어선 A호(215t, 승선원 13명)를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A호는 조기어장이 형성된 홍도 남서방 해역에서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을 무단으로 침범, 조기 약 32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무허가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후 담보금 부과(최고 3억 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BTS 정국 열애설 사진 동의없이 올린 노래방 관계자들 '허걱'

쌍나팔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정국의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노래방 종사자들이 입건.

○… 2일 경남거제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께 휴가 중이던 정국이 거제시내 한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 등에 동의없이 올린 거제시 노래방 관계자 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 유출된 노래방 사진으로 정국은 당시 동행한 여성 1명과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연예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는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

/연합뉴스